

##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증진방안

### 최진욱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분단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660만명의 동포들도 분단시켰다. 그러나 탈냉전과 남북간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재외동포사회 내부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국가별 재외동포사회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외동포사회와 모국과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은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과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으며, 더욱이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통일의 개념을 남북한간의 통일로 인식하며,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을 남북간 매개의 역할로 국한시켜왔다. 그러나 향후 통일의 개념은 남북한의 통일을 넘어서 전 세계 재외동포들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즉 모국 중심의 통일이 아니라 국가별로 상이한 정체성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 수평적 네트워크 구축을 의미한다. 한민족 공동체 형성은 한국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 또는 고유성을 인정하는 문화다원주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는 독자적인 문화영역을 형성한 각국의 한민족 공동체의 이중 정체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소외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민족 공동체에 한국이 중심이라는 우월주의는 자칫 해외 한민족 사회를 경시하는 풍조로 이어져 한민족 공동체 사회의 형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한민족 사회의 다중심적인 네트워크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통일의 개념을 넓힐 때,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은 ①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일체의 노력, ② 거주 국가 내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집단적인 노력, ③ 남북 양측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정체성 회복 노력, ④ 남북을 연결하려는 매개적인 노력, ⑤ 한 당사자와의 교류를 통해 재외동포 사회내부에서 통일의 동력을 끌어내는 행위, ⑥ 실제적인 모국에 대한 투자 및 지원, ⑦ 새로운 한민족의 공동 정체성을 향한 개념화 노력으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사실 수평적 네트워크의 구축 시도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이미 남한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서 국가·정치 중심이 아닌 민족과 문화 중심의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민족 네트워크의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남북대결 구도속에서 남북한은 진정한 의미에서 교포사회의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정책을 전개 했다가 보다는 남북간의 대결구도 속에서 상대방을 견제하고 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표에 충실하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중국과의 변경무역, 총련상공인들의 지원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챙겼고, 남한 역시 경제개발과정에서 재외동포사회의 많은 기여가 있었다. 즉 재외동포정책을 외교정책과 마찬가지로 실리위주의 정책으로 간주함으로써 재외

동포사회의 신뢰를 쌓는 데 실패하였다.

남북한 재외동포정책의 방향은 상대방을 반대하고 자국에 우호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냉전기 북한은 재외동포정책의 목표 중 하나가 북한을 지지하고 남한정부를 반대하는 투쟁에 두었고, 총련 뿐만 아니라 서방국가에서도 반남한정부 조직을 구축하였다. 남한정부는 북한의 남한정부 반대투쟁을 억제하고 재외동포사회를 친남한화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한편, 탈냉전기 남북한은 입장이 역전되어 북한이 수세적 입장에서 사회주의권 재외동포사회가 남한정부와 밀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남한정부는 일본과 같이 남북한 대결이 첨예하였던 곳에 대한 지원을 줄이고, 독립국가연합과 중국 등을 포함한 '새로운' 동포사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탈냉전기 재외동포정책은 사회·문화·경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가난, 식민지, 한국전쟁, 냉전 등 대체로 부정적 요인에 의해서 야기된 '코리아 디아스포'라는 21세기 대한민국에게 기회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동류의식을 가지는 상당한 규모의 동포사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민족 전체의 미래를 위한 귀중한 자산으로 평가된다. 20세기 전반기 한국민족주의의 화두가 자주독립이었고 20세기 후반기에는 통일이었다면, 21세기 한국민족주의의 화두는 한민족 공동체가 될 것이다. 해외의 한민족 사회가 거주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한 상태에서 고국에 대한 민족의식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내외 인적 자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세계화시대의 경제·문화전쟁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수평적 네트워크에 기반한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무엇보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정부는 재외동포문제를 주요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재외동포의 동질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며, 주변국의 역사왜곡, 동화정책, 차별정책 등에 강력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각국의 한민족 사회를 연결하는 조직망을 구축하고, 지도자를 양성하며, 공동의 이익을 확장하는 사업 등이 요구된다. 셋째, 건강한 한민족 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해서는 현 거주지에서의 성공적인 정착이 중요하다. 경제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 영향력의 확대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한민족 네트워크가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것은 북한에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 노력에 앞서 국내적으로 다민족·다문화사회에 걸맞게 소수민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제 한민족의 개념은 한반도를 벗어나 한인이 거주하는 전 세계로 확대되어야 하며,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만의 통일이 아니라 전세계 한민족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 재외동포는 통일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통일한국의 주요한 행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과정에 재외동포의 역할을 부각시킴으로써 한민족 네트워크 개념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서 부딪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통일을 계기로 통일한국의 국가브랜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